

핵안보정상회의 평가와 반핵평화운동의 과제

박상은, 수열, 임월산

<요약>

지난 3월 26, 27일 양일간 서울에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53개 국가와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군사·안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세계적 핵안보 체제 확립, △핵물질 관리,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통합적 접근, △핵물질 관리·추적체제 구축,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가역량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성명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그러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물질 불법거래와 적절한 방호를 확보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했다. 또한 참가국들이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2013년 말까지 발표할 것을 장려하는 수준에 그쳐 무기급 핵물질 감축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이에 반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위축된 핵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외 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핵테러 방지를 빌미로 한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가-학계-산업계'로 이어지는 핵발전 이권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한국은 미국의 핵 정책, 대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호전적인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문제점에 공감한 한국의 반핵평화운동 단체들은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행동'을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핵안보정상회의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향후 노후 핵발전소 문제,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 등 정세적 사안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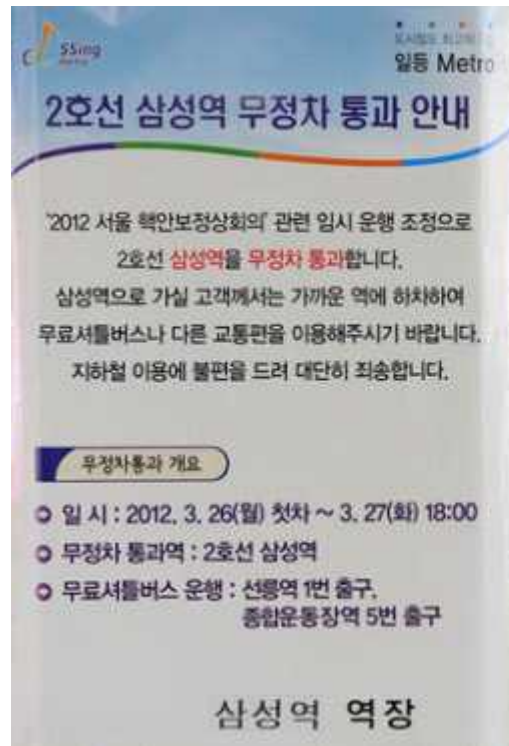
1. 핵안보정상회의의 진행 상황

○ 군사·안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 2012년 3월 26, 27일 양일간 서울에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됨.
- 53개 국가와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들을 비롯해 수행단 5천여 명, 행사 관련 인원 4만여 명, 내외신 기자 3,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의전용 차량만 360여 대가 동원됨.
- 양일간의 핵안보정상회의의뿐만 아니라 250여 차례에 달하는 참가국 정상간 양자 회담이 진행되었고,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핵산업계회의), 핵안보 심포지엄 등의 부대행사가 개최됨.

○ 국제회의를 빌미로 한 과도한 경호 조치 논란 [그림 1] 무정차 통과를 알리는 안내문

- 핵안보정상회의가 진행된 강남 코엑스 주변은 높이 2m, 길이 1570m의 담장형 펜스로 차단되었고, 주변 도로에는 높이 2.2m, 길이 1882m의 철제 펜스까지 설치. 3월 26일 첫차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코엑스가 위치한 삼성역은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함. 인근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도 임시로 자리를 옮겨 운영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
- 하루 방문객이 10만 명에 달하는 코엑스물이 사실상 운영을 중단함. 코엑스물은 정상 운영되지만, 회의 기간 중 일반인 출입이 전면 통제됨.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인근 업체들의 불만에 제기됨.
- ‘자발적인 차량 2부제’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 보도나 정부에서 부착한 홍보물에는 ‘차량 2부제 실시’만 나와 있어 강제 조치로 이해됨.
- 경찰은 외국 정상들을 볼 수 있는 주택과 아파트 등지에 옥상 이용을 자제하고 창문을 열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경호에만 치중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코리아헤럴드, 3/28일자)
- 회의장 주변의 노점상 철거가 일찍부터 진행되었고, 강남경찰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숙자풍’의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치안대책을 발표해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음.



2.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 분석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성명인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함. 서울 코뮤니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세계적 핵안보 체제 확립
- ②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강화
- ③ 핵물질의 적절한 방호와 관리
- ④ 의료, 산업 등에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원의 안전한 관리
- ⑤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통합적 접근
- ⑥ 핵물질의 운송보안 강화, 핵물질의 관리·추적체제 구축
- ⑦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가역량 개발
- ⑧ 핵감식 역량의 개발과 향상
- ⑨ 핵안보 문화 증진, 핵안보 훈련 및 지원 센터 설립
- ⑩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조치 강화
- ⑪ 핵안보 체제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체제 마련에 실패

- 서울 코뮤니케는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되기 위해서 참가국들의 국내 승인절차를 촉구함.
- 핵물질방호협약은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IAEA가 제안해 1980년에 채택, 1987년에 발효되었으며, 핵물질 관리에 관해서 유일하게 법적 강제력을 지니는 협약.
- 2005년 7월에 핵물질방호협약 개정회의가 개최됨. 협약 적용 범위를 국가 간 운반 중인 핵물질에서 국내 소재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핵물질 생산, 처리, 사용, 취급, 저장, 처분하는 건물 및 장비 일체를 포함하는 핵시설로 확대한 개정안이 채택됨.
- 2012년 4월 현재, 협약 당사국인 145개국 중 55개 나라만이 비준한 상태로 발효를 위한 97개국 비준동의에 훨씬 못 미침.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참가국들의 협조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구속력을 갖는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

○ 무기급 핵물질 감축에 대한 강제력 부재

- 서울 코뮤니케는 참가국들이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장려하며, 자발적인 구체 조치들을 2013년 말까지 발표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힘.
- 한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에 12만 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이 산재해 있다면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물질을 줄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해 옴. 그러나 서울 코뮤니케는 참가국들이 자발적인 계획을 2013년 말까지 발표할 것을 권고할 뿐, 어떠한 강제조치도 없음.

※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물질 감축을 강제할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감축은 강제로 하게 되면 속일 수가 있다'며,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자발적인 감축의 경우 핵물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가장 많은 고농축우라늄을 갖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7톤과 48톤 감축에 불과함. 미국이 약 300톤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감축량은 매우 적은 수준임.

○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해 핵발전 확대의 근거를 마련

- 서울 코뮤니케는 원자력 안전 조치와 핵안보 조치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힘.
- 원자력 안전 문제, 방사성 안보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달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추가된 의제임. 이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따라 핵발전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핵산업계회의(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연계 및 증진 방안'이라는 워킹그룹이 운영됨. 핵시설의 안전 문제를 핵안보와 연결지어 핵시설에 대한 테러의 위험성을 강조함. 이를 통해 현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핵테러로 두려움의 대상을 옮기려 함.
- 이는 핵시설의 안전을 강조함으로써 핵발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정부가 발간한 홍보책자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핵산업계회의 이후 국내 핵시설에 대한 시찰 프로그램이 진행됨.
-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세일즈', 핵발전 확대 정책과 깊은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3. 핵안보정상회의가 감추고 있는 것

○ 핵테러 방지를 빌미로 한 군사적 조치의 확산

- 서울 코뮤니케는 '전 세계적 핵안보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UN안보리결의 1540호를 지지하며, 임무가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체 및 특히 핵 물질과 연관된 관련 물질 취득 방지에 대한 안보리결의 1540호의 전면적인 이행 필요성'을 강조. 또한 안보리결의 1540호에 따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동 결의안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 협조 제공 등을 촉구했음.
- UN안보리결의 1540호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수출 통제 체제 강화 요청으로 2004년 4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으로, 모든 회원국이 핵무기 확산 방지와 수출 통제를 위한 법률의 마련과 집행을 의무화하고 있음.
- 때문에 결의안 1540호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어 '깡패짓'이라 비판받아 왔던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¹⁾
- 결의안 1540호를 강조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PSI로 대표되는 미국의 적극적 반확산 정책의 국제적 수용과 확산을 의미함.

○ 고농축우라늄 사용 최소화는 핵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교육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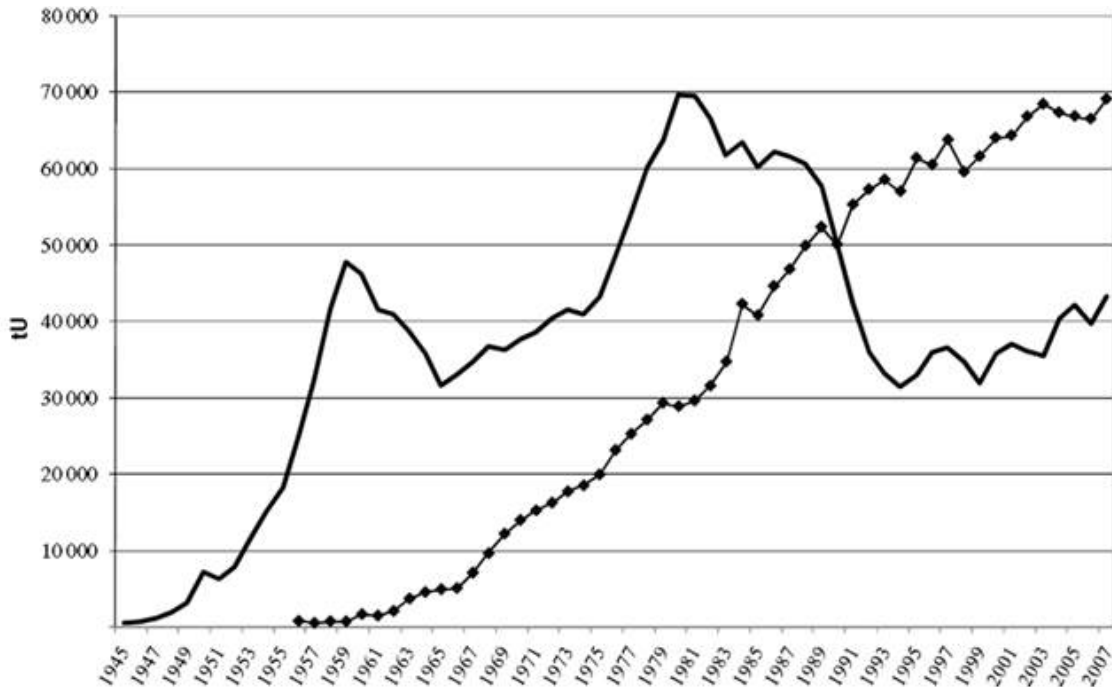
- 서울 코뮤니케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에,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장려함.
- 고농축우라늄의 희석을 통한 저농축우라늄으로의 전환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음.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러시아가 추진한 '메가톤 투 메가와트'(Megatons to Megawatts) 프로그램임.²⁾
- 고농축우라늄을 희석하면 더 많은 양의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음. 이는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이 하향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라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음.

※ OECD/NEA(경제협력개발기구 내 핵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가

- 1)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해상이나 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세워서 검색,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군사력 사용을 동반한다. 국제법에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권리(UN 해양법협약 87조 자유항행원칙)와, 다른 나라의 영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해적질을 하지 않은 선박은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동 협약 17/19/23조 무해통항권)가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PSI는 의심만으로 배를 세우거나 승선하고 나포할 수 있으며,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PSI에 정식 참여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주변에서 PSI가 시행될 경우 북한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나올 것이라며 참가하지 않았다.
- 2) '메가톤 투 메가와트' 프로그램은 러시아의 핵무기 해체로 얻어진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1993년 미국과 러시아가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러시아의 핵탄두로부터 얻어진 고농축우라늄 400톤이 미국의 핵발전소에 사용되는 저농축우라늄 연료로 전환되었고, 이는 핵탄두 16,000개 분량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까지 핵탄두에 포함된 핵물질 500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가정, 기업, 학교, 병원의 10%가 이 프로그램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장 많이 쓰이는 가격대(40\$/1kgU 미만)의 우라늄의 확인매장량은 796,000tU (우라늄톤)임. 2008년 기준 세계 우라늄 수요는 연간 59,065tU이므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13년 정도면 저렴한 우라늄이 고갈되어 우라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그림 2] 연간 우라늄 생산과 수요(1945-2007년)



※ 실선이 생산량, 점이 포함된 선이 수요량, 2007년 수치는 추정치.

- 고농축우라늄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고농축우라늄 희석은 일정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핵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국가-학계-산업계로 이어지는 핵발전 이권 네트워크의 강화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핵안보 심포지엄이 개최됨.
-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에는 핵산업계의 최고경영자들과 핵 관련 국제기구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함.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은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한 원자력 산업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핵산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핵안보 정상회의에 건의해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핵안보 심포지엄은 핵안보 전문가, 학자, 원자력 관련 연구소 책임자 등 50개 국가의 1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주요 핵안보 이슈, 후쿠시마 이후 핵안보와 안전 연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핵산업계-전문가-찬핵 관료로 이어진 이른바 ‘핵 마피아’는 핵발전과 관련된 거대한 이권 네트워크로 핵발전의 유지, 확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

임.

-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과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의 핵산업 이권 네트워크는 전에 없이 강고해지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나서 핵발전소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확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핵산업계의 연계가 훨씬 더 강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 호전적인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 확장

- 3월 25일 저녁,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됨.
-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밝힘.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동맹이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인함.
- 한미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해서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나가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힘.
 - ※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미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함.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로는 많은 것들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밝힘.
- 양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을 더욱 현대화하기 위해 6월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이 만나 동맹 강화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함.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한국 방문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점을 반영한다며, 그 초석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강한 동맹들에 있다고 발언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됨. 현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단순히 사거리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체제를 추진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이라 밝힘.
 - ※ 청와대 관계자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조금 서두르겠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사거리 문제가 분명히 정리될 것이다"라고 발언함.(동아일보. 3/26)

4. 결론: 반핵평화운동의 대응과 과제

○ 핵안보정상회의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데 실패함

- 핵안보정상회의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국내 민중·시민운동 진영은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결성하고 활동을 진행함. 2월 15일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중 강연회, 기자회견을 비롯한 언론 사업, 집중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침.
- 그러나 대항행동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격 규정 및 대응 기조, 활동방식에 대한 이견이 부각됨. 이후 활동 과정에서도 기조에 대한 이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참가단체들의 결합력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 논의가 지연됨. 집중 행동주간의 결합도 매우 저조하게 진행됨.

※ 일부 시민단체는 핵안보 조치 자체(핵시설 안전 강화, 핵물질 방호와 감축)는 필요하기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함. 민중운동 진영은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핵무기보유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입장차는 대항행동 명칭과 기조 결정, 선전물 제작, 집회기획 등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대항행동의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음.

- 참가단체들 간 입장 차이가 크게 부각되고 결합도가 떨어지면서 핵안보정상회의의 문제점을 적극 폭로하고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함. 결과적으로 참가단체들의 향후 공동 활동 동인도 축소됨. 대항행동 전체 평가회의에서 향후 활동은 개별 단체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대항행동은 해소하기로 결정.

○ 향후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 과제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 한국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발전소 수출 확대, 핵발전 확대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곧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2012년 내에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임.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은 플루토늄 추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핵평화운동 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1973년 발효되어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핵발전 연료의 이용에 관해 한국과 미국이 맺은 협정으로, 한국이 핵분열성 물질이나 기술을 유입하거나

유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핵발전소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또 수출 대상국에서 핵분열성 물질과 기술의 유출을 막으려면 대상국 또한 미국과 비슷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협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있다. 현재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도록 협정을 고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계획이다.

사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는 핵산업계의 사활적인 문제다.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핵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부존량은 극히 한정적이다. 따라서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재처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만 하더라도 2006년 말 기준으로 7,960톤의 사용후핵연료, 즉 폐연료봉이 핵발전소 안에 보관되어 있다. 폐연료봉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어떤 나라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격리 보관할 뿐이다. 따라서 핵발전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더라도 폐연료봉의 처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처리 과정은 사용한 연료봉에서 핵발전에 이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분리해내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연료봉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분리, 추출할 수 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핵분열 과정, 즉 핵발전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 지난 2월 9일 한국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 정비 중 전원 상실 사고 발생했으나 이를 한 달여간 이를 은폐했던 사실이 밝혀짐. 수명 연장된 노후 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음. 이는 핵발전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문제로 반핵평화운동 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끝>

<더 읽어볼 자료>

[소책자] '핵안보정상회의 10문 10답'-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810>

임필수. 한반도 핵위험의 현실성.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813&page=1>

연속기고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http://www.newscham.net/news/search.php?board=search&s_mode=all&s_arg=%ED%95%B5%EC%95%88%EB%B3%B4%EC%A0%95%EC%83%81%ED%9A%8C%EC%9D%98+%EC%9D%B4%ED%9B%84